

월요광장

정부·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성 불변의 법칙을 생각한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6월 4일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필자는 스위스에서 발의된 기본소득제 법안과 정부·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성찰의 필요를 생각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제법안은 2013년 12만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는데, 취업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가 성인 모두에게 우리 돈으로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2015년 10월까지는 국민투표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이런 기본소득제가 불가능할까? 1948년 건국헌법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공화국 이후에는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무가 추가로 규정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근로의 의무가 있으면

관리로서 취업의 권리, 즉 취업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취업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으면 소득의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의무와 권리, 책임과 권리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군가가 이런 기본소득제와 시민의 권리로서 취업권에 대한 공약을 기대해 본다. 제발 예산의 한계 등의 이야기는 안했으면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 검토부터 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

이제 한국사회는 참으로 진지하게 공공성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에 들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을' 아니다. '갑'으로서의 국민이 '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그들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재설정하게 하고, 다짐받아 '갑'과 '을'을 벗어나 시민과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공유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공공성에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확인된 공공성 불변의 법칙 2가지를 살펴보자. 공공성 불변의 법칙 제1은 사회나 국가의 건강은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이들이 공적 이성을 갖도록 교육시켜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활성화되고 공론이 만들어지고 공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천적 창의력이 확보된다.

공공성 불변의 법칙 제2는 상실된 공공성은 반드시 복원되고 공공성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사회, 국가, 공동체의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공공성 필연의 법칙이다.

이러한 역사적 법칙으로까지 확인된 공공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말한다. 즉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돕는 것, 적절한 영양의 공급, 질병에서의 탈피, 일찍 죽지 않은 것, 문자해독,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직업과 역할의 수행,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소통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가능한 실현 할 기회와 지원을 받는 것 등이다. 이것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잠재능력의 토대이며 공공적 가치이다.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공중전화가 적자임에도 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전기를 임의로 끊을 수는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수도를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채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살아갈 권리의 회복, 공간 이

동권,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양심을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공공적가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이러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공공성 구현의 전도사이며 수호자로서의 책무와 용기, 지혜, 양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이들 각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북무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자신들이 공공성 위기가 세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성 복원과 필연의 법칙에 맞는 성실한, 역사상, 정치적, 지혜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도대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저 출산율의 국가에서 국가적 화두의 제일의 명제가 공공성의 진화과 확대에 맞춰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우리의 양심이 조각난지가 오래이며 상식과 비상식, 참과 거짓, 약속의 준수와 폐기라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다르다.

그대로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든가 나서서 선거 때라도, 지금 여기에서라도 이러한 공공성 회복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야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생명과 영혼을 조급이라도 연장시키는데 동참하는 일일 것이다.

법조칼럼

상춘(賞春)



유천열  
광주지검 검사

절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기쁘는데, 더하여 눈과 코를 즐겁게 하는 꽃과 사람들, 그 향기는 어찌먼 촉촉하다.

'춘추추풍' 4계절 중 첫 번째 계절 봄.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그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시각이 주는 설렘과 기대 때문일 것이다. 꽃이 피고 나면 나뭇잎 무성한 여름을 지나 열매 맺는 가을, 그리고 만물이 잠드는 겨울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절의 시작. 다양한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봄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된다.

앞으로 다가올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다. 인생 선배들이 청춘(靑春)을 예찬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인생에 있어 봄은 청춘이고, 청춘은 곧 가능성이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젊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일까. 요즘은 청춘을 보기만 해도 즐겁다. 몇십년을 반복해서 맞이하는 봄이지만, 그 시작에 대한 설렘은 언제나 변함없는 것처럼.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썸타다', '썸남썸녀'라는 말이 있다. 영어 썸(something)의 첫음절 '썸'에서 나온 이 말들은 남녀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유행했던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가요를 생각나게 하는 유행어인데, 최근 '썸(SOME)'이라는 노래가 가요순위 1위를 하는 것을 보면 시각이 주는 설렘은 세대를 막론하는 것 같다.

봄을 맞이하여 상춘하고 싶은 마음은 한 가득인데, 어쩐지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은

요즘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즘 뿐만은 아닌 듯하다. 검사로 임관한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봄을 만끽한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보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문제였던 것 같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상춘의 시간을 내리라 계절의 시작에서부터 마음을 다잡아본다.

덧붙여 언제부턴가 세간의 핫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듯한 법조계이지만, 이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파이팅'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겐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하여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랑받는 법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길로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법조계는 이 계절과 마찬가지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기고

‘클린 경선’ 공명선거의 지름길



이남오  
전남도선관위 지도과장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당내경선 방식도 있다. 이런 당내경선은 본래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정당 내부절차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이다. 일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제도의 도입으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경선후보자의 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정당이 주관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정당이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송을 이용한다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과 함께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

선은 정당의 공천방식을 민주적 방식으로 개선했다. 선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의 당내경선과정을 돌아보면 경선후보자들의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당비 대납과 같은 편법이 동원된 권리당원 확보경쟁, 경선선거인 모집 과정에서의 선거인 매수, 경선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와 급료·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와 다름없는 각종 불·탈법행위가 경선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벌써부터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불법 당원모집, 공무원이 경선 후보자인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사례 등 크고 작은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경선이 본격화 될수록 더욱 과열·혼탁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공무원의 경선 관여,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급품수수 및 매수, 불법 여론조사 및 사조직을 이용한 경선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사·단속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본 선거의 예비단계인 당내경선에서 클린경선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은 그 자체로서 당내민주주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명선거 실현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당내경선이 과거의 잘못된 폐해를 떨쳐내고 경선후보자들의 아름다운 경쟁으로 거듭나 본 선거의 공명선거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선후보자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과 공약으로 경쟁당파에 대결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내경선이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자랑스런 콘텐트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전월세 대란’에 서민들 한숨 소리만...

요즘 전세나 월세를 얻으러 다니다 보면 전월세 인상속도가 가파르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바꿨는데 요즘 전월세 얻기도 힘들지만 전월세 가격이 너무나 비싸졌기 때문이다.

요즘 월세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건을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는데다 생활비와 자식 교육비 등을 내기도 빠듯한 데 월세까지 오르면 생활하기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보니 전국적으로 평균 월세가 지난해보다 2~3%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유는 집값이 싸니까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다. 또 입주 아파트가 줄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한 것도 한몫한 것 같다.

요즘 전세에서 반전세로 많이들 바뀌는 추세다. 전세값이 오르자 새로 생긴 방식인데 전세금이 오른 금액만큼을 월세로 받는 보증방식 월세가 바로 반전세인 것이다. 요즘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다. 집에 돌아다니다 보면 2년전보다 40%는 오른 것 같다.

사실 월세는 말 그대로 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전세가 자주 월세로 바뀌고 거기가 반전세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 무주택자

들은 선택의 여지도 적다. 기존에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도 수익이 높은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즉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전세를 주고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든 대신 소형 아파트나 다가구 등으로 등으로 월세를 놓아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는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전월세 대란이라는 말을 이제는 좀 안듣고 살수는 없을듯,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社說

세계농업유산, 농도 전남의 활력소 삼아야

완도 청산도의 명물인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돌담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농업유산은 법이나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자연·농업지역을 선정해 보존하는 제도로서 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농산물 판매 급증과 관광 수입 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전체일로의 전남 농업에 대단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농업 비중이 큰 전남도와 각 시·군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남은 보성 차밭, 담양 대나무술, 화순 다량이논과 붓도담, 구례 산동 산수유 재배지, 무안 회산 백련지 등 훌륭한 농업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구들장논은 온돌에 쓰이는 납판란 구들장을 논바닥에 깔 후 그 위에 흙을 쌓아 만든다. 여기에도 염전처럼 인공 바닷을 만들어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청산도 일대 57필지 4.9ha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농업유산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지난 2011년 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농·수산물은 유명 백화점과 호텔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고유의 브랜드도 만들어 20~30%가량 비싸게 팔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전남도는 풍부한 농업유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원들을 잘 가꾼다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어려움을 처한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때문이다.

이번 구들장 논 지정을 계기로 도내 곳곳에 분포한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가 시급하다. 전남은 더 많은 유산 발굴과 부가가치 제고를 서둘러, 한 차원 높은 농업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집 놔두고 고통받는 목포 아파트 주민들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3차 아파트 800여 명의 주민들이 주차장 붕괴 옛세책인 7일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붕괴 원인 규명과 아파트 안전 진단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보상금 지급도 이견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입주자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주차장 붕괴 원인을 밝히고, 아파트 구조물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살피고자 공인된 기관에 진단을 의뢰했지만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3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75가구 입주인 800여 명은 시와 업체가 지정한 호텔, 모텔 등지에서 5일째 밤을 보냈다. 주민들이 통제 중인 경찰 안내를 받아 집을 오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건설사와 주민들간 피해보상도 난관을 겪고 있다. 건설사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가구당 주거생활비로 3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이후 하루 얼마씩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목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설사가 근본 대책 마련은 미룬 채 공사를 강행,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귀책 사유가 시와 건설사에 있는 셈이다.

시와 건설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주차장 붕괴 원인을 밝히고, 아파트 구조물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살피고자 공인된 기관에 진단을 의뢰했지만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3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75가구 입주인 800여 명은 시와 업체가 지정한 호텔, 모텔 등지에서 5일째 밤을 보냈다. 주민들이 통제 중인 경찰 안내를 받아 집을 오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건설사와 주민들간 피해보상도 난관을 겪고 있다. 건설사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가구당 주거생활비로 3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이후 하루 얼마씩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을 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외지인들이 말하는 광주의 첫 인상은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광주의 4대 관문(나주·화순·담양·장성) 어느 쪽으로 접근하더라도 회색 아파트 숲이 반긴다.

실제로 광주는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집 10채 가운데 8채 가까이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시장에서 광주의 또 다른 특징은 주택보급률은 103%에 달하지만 자가보급률은 60%대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는 가구당 집을 한 채 이상씩 가지고

아파트 도시 광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10명 중 6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광주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하지만 미연을 들여다보면 임대사업자들에게 광주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1년 9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현황 자료였는데,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광주 남구에 사는 47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가 가진 아파트는 무려 2123채였다.

내가 아는 지인도 우연한 기회에 광주 남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후 쓸쓸한 월세 수입을 얻고 있다. 10여년 전 자신의 처제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아예 낙찰을 받아 지금까지도 연 10% 가까운 월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분까지 더하면 당시 투자금액의 3배 가까이 벌었다고 했다.

광주 남구의 전세가율이 79.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뉴스

가 나왔다. 전세가율은 아파트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광주 남구의 매매가 1억 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8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좋은 학군 등 교육여건이 전세가율 전국 최고의 배경이다.

나주혁신도시 입주자 완료되면 광주 남구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아파트 도시 광주에서 남구의 불개 사회는 여전한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집 한 채 없는 서민 입장에선 씁쓸한 뉴스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661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일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